이래경 낙마에 '이재명 리더십' 상처…혁신기구 출범 '험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지도부 '부실 검증' 도마위
위원장 인선 장기화 전망…'계파갈등' 재점화 불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한 데 이어 당 쇄신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 추천을 통해 본인이 최종 결단한 인선이었으나 한나절 만에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없던 일'이 되면서 지도부는 '부실 검증'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해서 처리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임명 철회' 요구는 이 대표의 임명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천안함 자폭' 등 이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과격' 발언들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천안함 자폭' 발언은 여론 반발이라는 '후폭풍'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인화성이 어느 사안보다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에 그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비명(비이재명)계까지 가세했다.

비명계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를 꾸리려는 것이냐", "이재명 사당화하려는 속셈이냐"는 비난도 분출했다.

지도부는 그가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이 된 과거 발언 역시 "당 외부인으로서 한 말로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권칠승 수석대변인)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 확산했다.

설상가상 권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과 관련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이 위원장의 해촉) 얘기를 했나"라고 반문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 출범은 또 한 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쇄신 목소리가 분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기구 구성의 첫 단추인 위원장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 상당수가 고사하면서 '의총 결의' 후 보름이 지나도록 구인난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모셔온 이래경 이사장이 '부실 검증' 논란 속에 하루만에 낙마하면서 위원장 인선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 관계자도 "예상치 못한 낙마 사태로 혁신기구 구성 시점은 한층 더 멀어졌다"며 "이렇게 된 이상 위원장 사전 검증 작업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에서는 이번 낙마 사태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리더십 문제를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여 해묵은 계파 갈등도 재현할 조짐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런 사람에게 당 쇄신을 맡기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지도부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격상"

제68회 현충일 맞아 천안함 장병에 유공 증서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12만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천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김진수기자

정부,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통합 법률' 내일 관보 게재…내달 9일 시행

정부는 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 법률)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공포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 법률은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김진수기자

국회 기재위,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검증 확대

與, 외부감사 10억→3억·정산보고서 3억→1억 기준 강화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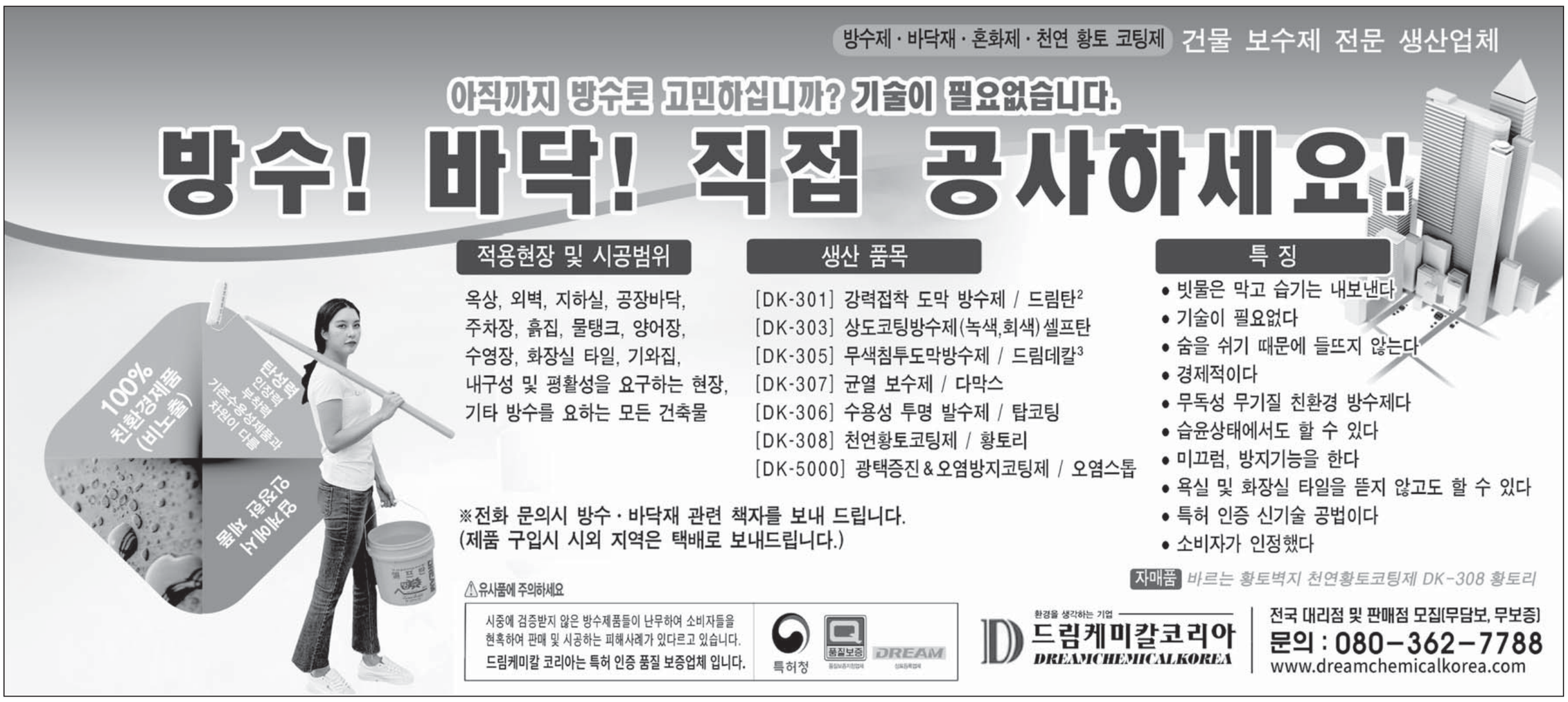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기재위에 계류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급 현황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환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당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부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3천만원 넘게 수령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야당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법의 경우 아직 이번 소위 안건에 올라갈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안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제정안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